

# UR협상과 양돈생산기반



조진형  
(대한양돈협회 부회장)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생활 안정의 갈피를 잡기 어려운 여건을 우리 양돈인들은 합심단결하여 방향설정을 재정립 하며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야 하겠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많은 공산권 국가들과 경제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맺고, 교역을 하는 큰 정세의 변화속에서 살고 있다.

자유진영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마음대로 하던 미국이 많은 재정적자 누증의 부담감을 안고 자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자국경제의 보호책을 강구하게 되며, 한국과 같은 약소국에게 수입개방압력을 가하는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후진성을 면키 어려운 약소국들은 아무리 자국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한다 하여도 냉정한 국제 사회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처해 살아가는 도리밖에 없다.

지난 연말 UR협상의 매듭은 미결로 연기되었지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UR협상은 우리 한국에게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농업보조금의 감축 및 철폐, 수출보조금의 철폐 등 농축산물무역에 있어서 자유 경쟁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품목을 쌀,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닭고기, 참깨, 보리 등 15개 품목을 제시하며 협상에 대응했었으나, 미국과 협상의 거리가 너무 멀은 것으로 결렬되었으며 3월에 다시 협상을 통해 결말이 나리라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의지는 국내교역을 거시적으로 보아, 농축산분야는 크게 양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산인으로서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로 새로운 경영구조 조정과 각오를 해야 하겠다.

우리 국내의 양돈업계는 축산물의 수급정책의 부재와 가격안정제도의 불균형으로,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가격폭락의 영향과 예상되는 축산물 시장개방과 사회환경의 변화,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의 애로 등의 원인으로 1988년부터 1989년까지 2년여에 걸쳐 3분의 2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의 도산은 생산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6·29선언 이후 대다수 도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복지의 증진으로 농촌의 인력이 도심지 공장으로 이직하므로써 대다수 부업농이 폐업하였으며 전·기업농에서도 생산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 우리나라의 축산장래에 어두운 징조라 말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돈육의 수급균형이 부족 현상을 이루며 가격이 상승하여 모든 증가가 충분히 가상되나, 실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수급정책

“국내 양돈업계는 축산물 수급정책의 부재와 가격안정제도의 불균형으로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가격폭락 영향과 축산물 수입개방, 축산분뇨 처리의 애로, 인력난 등으로 '88~'89 2년간 축산농가중 2/3가 도산하므로서 생산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업농 보호정책과 계열화사업 지원, 시설자동화에 장기저리로 과감히 투·융자를 하는 한편,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재활용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겠다.”

이나 가격정책의 부재로 축산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으며, 모든 물가의 상승이 돼지고기 생산원가에 미친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농민을 전혀 생각치 아니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으름장이나 놓으며 농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시점에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근로자들의 생활비에 미치는 부담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돼지고기 수입 운운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것은 3월의 UR협상시에도 더욱 불리한 테이블이 된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산업의 구조개편을 정책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

부업농을 보호하던 정책에서 전업농 보호정책으로 유도해 주며, 계열화 생산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시설자동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꾀하며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전업농에게 시설현대화자금을 과감히 장기저리로 투·융자 해주고,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제도를 현실화 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비 보장을 하고, 축산관측기능의 강화로서 수급조절을 해야 하겠다. 또한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재활용 개발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며, 축산인은 경제부흥의 산업사회에서 돼지고기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사명감으로서 경영 개선과 기술개발을 하고 육질개선을 하여 경영합리화에 전력투구하여야 하겠다. **■**

정부가 농민을 위해 생각치 않고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를 수입개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농민을 불안하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도 바람직 하지 않다.